



항운노조상용화특별법 대안입법 추진 논란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항운노조입장 반영

정부가 항만근로자노무공급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상용화특별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상용화특별법 대안입법은 항운노조 입장을 반영, 정부가 마련한 상용화특별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 간에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이 추진주인 특별법안은 현행 항운노조의 항만에 대한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항운노조 상용화방침도 노사합의하에 추진하고 합의가 안되면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상용화 추진시에는 노조원의 경력 등을 감안해 공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년 전에 하역사업자 등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하역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하역근로자의 채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정원의 임시등록을 받아 채용하도록 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상용화특별법안이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의 특별법안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나 박승환 의원의 특별법안은 모두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용화협의회도 노사만이 아닌 노사정협의를 통해 추진

해야 한다고 명시, 김 의원의 대안입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안을 지난 8월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9월2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쳤으며, 9월 중순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입법과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김 의원이 대안입법까지 국회에 상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벌여야 할 항운노조상용화 관련 특별법안은 모두 3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김 의원이 추진하는 대안입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상용화 특별법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들 3가지 법률안을 놓고 조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짜맞추기를 할 경우 정부의 항운노조 노무공급개편작업이 상당한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